신한금융그룹

현장 관점의 포용금융 과제

(June 17, 2026)

1. 금융사의 고민 _ 두 가지 역할

- 금융은 **금융회사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존** 하며,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니즈를 충족해야 함.
- 첫째, 금융회사로서 성장을 통한 투자자/ 고객 니즈 충족과 함께
  둘째, 금융기관으로서 양극화 현상 속 소외된 **서민 및 소상공인 대상 역할도 수행**해야 함.

금융회사으로서의 역할

투자자, 고객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니즈를 충족

- ✓ 지속적 성장을 통한 이익 증대
- ✓ 리스크 관리로 자본 건전성 유지

투자자 Needs 충족

- ✓ 新상품/ 서비스 기반 지속 제공
- ✓ 차별적 가치제공을 통한 혁신 서비스 제공

고객 Needs 충족

⋮

+

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

소외된 서민 및 소상공인 대상 역할 존재

- ✓ 경제 주체로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**버팀목/ 안전판** 제공
- ✓ 금융을 통해 신용도 상승 및 자산 증대의 **지렛대/ 사다리** 제공

⋮

2. 현장에서 바라본 포용금융의 과제 _ 리스크

- 포용금융에서 금융기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음. 문제는 포용금융 **대출상품의 연체율이 높은 것**.
- **일부러 연체 하는 고객은 없지만** 재무 여력 및 여건 상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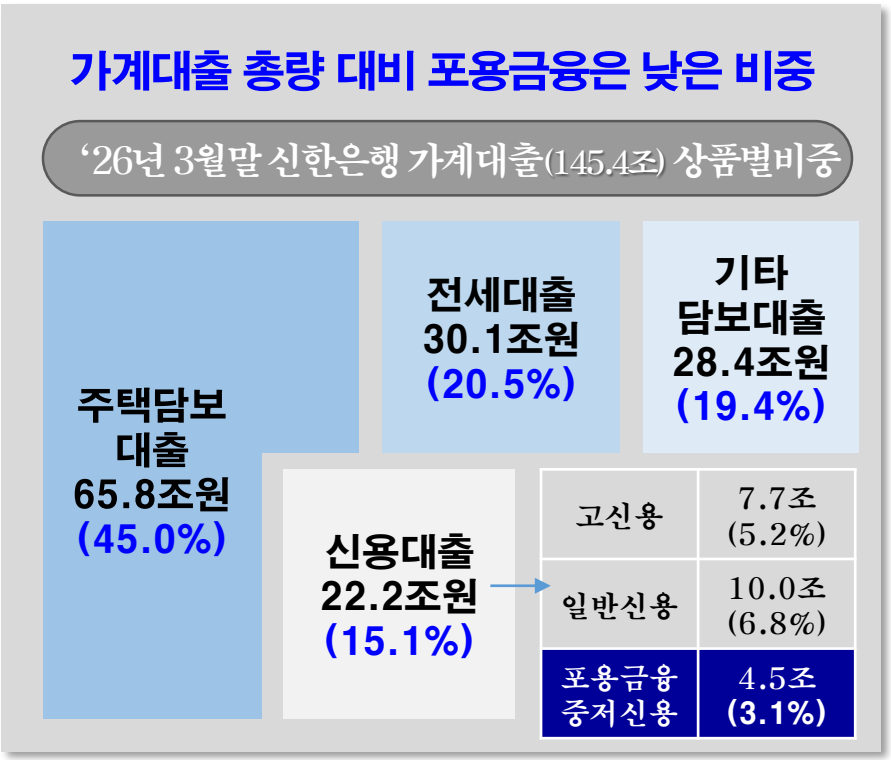
  → 결국 이런 부담으로 지금까지 포용금융 대출지원 비중이 낮았음.

✓ [신한은행 '25년 1Q, '26년 1Q 신용대출 연체율 비교]

☞ 은행 가계대출 **전체 연체율은 감소** (△0.04%p)하였으나,
신용대출 상품군 특히, **포용금융 연체율은 증가** (+0.35%p)

구분	'25년 3월말	'26년 3월말	전년동기대비
고신용	0.01%	0.01%	0.00%p
일반신용	0.01%	0.02%	0.01%p
포용금융 영역 중저신용	1.93%	2.28%	✓0.35%p
가계전체	**0.33%**	**0.29%**	✓**△0.04%p**

* 고신용 : 신용등급 상위 30% 이내 / 일반신용 : 신용등급 30%~50%
/ 중저신용 + 포용금융 : 신용등급 50% 이하 & 포용금융 신용대출 (새희망홀씨 등 정책상품)
** 신용 평점 없는 국내 차주는 중저신용+포용금융에 합산



3. 그럼에도 포용금융 확대는 외면할 수 없는 길

- 건전성 이슈에도 불구하고, **포용금융 확대는 K-양극화가 심화되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금융기관 측면 시대적 과제.**
- 금융회사 측면에서도 부동산 버블 리스크와 담보 위주 영업 제약을 고려할 때, 현재 높은 **부동산 담보 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필요.**
- 또한 우량 **고객기반의 지속 확대**도 필요한 바, 레드오션인 우량 신용시장 포트폴리오 의존도 낮출 필요가 있음.

그래서, 세가지방향에서 포용금융 확대 추진중

① 양적 확대	✓ 포용금융 양적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 측면 **서민 지원 및** 금융회사 측면 대출 포트폴리오 편중 완화와 고객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.
② 금리부담 완화	✓ 포용금융을 확대하되, 기존과 같은 고금리를 적용하면 부실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어, 금리부담 완화로 비우량 고객의 **우량 고객화를 유도, 금융의 선순환 구조**를 완성.
③ 대안신용평가 강화	✓ 신용대출 부실 부담은 결국 금융회사의 몫으로, 무차별한 대출 지원 보다는 중저신용 고객 중 **가능성이 있고, 지렛대가 필요한 고객을 선별할 선구안**이 중요.

4. 기타 드리는 말씀

금융당국에 대한 지원 건의사항

인센티브

✓ 페널티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이 스스로 포용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인책 필요.

✓ 건전성 부담 있는 금융회사에 과감한 **인센티브 (출연료 감면 등)로 동기부여** 되도록 지원 요청.

규제 완화 (데이터)

✓ 고객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대안신용평가 모형의 활성화가 중요.

✓ 특히,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모형 도입과 다양한 대안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**금융회사 데이터 활용의 자유도 높여줄 필요.**

☞ **(예시)**

□ 가명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 소요되고, 1회성으로만 허용되는 가명결합 제약으로 인해 모형 개발 시점마다 비효율적 비용이 반복 발생 (금융위 주관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논의 중)

□ 자회사 간 고객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원칙인 바, 활용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.
대안신용평가 개발에 있어서는 정보공유 특례로 고객 사전동의 없이 사후 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 요청